

“SRF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해야”

〈고형폐기물〉

평화당 정동영 대표, 법안 대표발의... “폐기물에 잔존 유해물질 소각될 때 다이옥신 등 배출 우려 크고 국제에너지기구도 인정 안해 전주·예산·원주 등 도시에서 건설 중인 발전소 건립 중단시켜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사진)가 8일,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고형 폐기물(SRF) 발전은 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라며 “전국에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하고 전주 등 도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나주와 충청남도 예산, 경기도 포천, 강원도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소 추진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서도 지난달 27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주민 1천여 명이 ‘발복동해서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LNG의 668배나 되는 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불안이 크다”며 “발전시설로 포장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치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SRF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만나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기물에너지 발전시설은 폐쇄되어야 하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폐가나 산업 폐기물 등 비재생 폐기물(Non-Renewable Waste)로부터 생산된 폐기

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명시하는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한편 정동영 대표가 산업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51개 SRF 발전사업 가운데 호남이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전북이 전주의 익산, 군산 등을 포함하여 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산업화 시대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이 이제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발전소 난립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폐기물발전소가 호남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의혹 해소 독립적 재판부 구성 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사건을 임의의 방식으로 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판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법무부·법원행정처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참석해 박지원 민주당 화당 의원의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별재판부 형식이든 뭐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런 중요한

본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담보된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 그게 특별재판부일수도 있고, 결국 똑같은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내부검토 문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내부검토 문건에 다 들어 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가 사법부를 향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8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송하진 도지사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국민주권을 하고 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정책세미나 오늘 개최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에서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경찰청과 공동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지자체·교통유관기관·학계·언론·시민사회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다.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낮은 처벌규정에 대해 불합리성에 대해 인식하고 2016년 제4기를 출범한 이래 매년 1회 이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해운대에서 있었던 윤창호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장택영 수석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국내 음주운전 사고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개관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통한 국내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명모희 책임연구원(도로교통공단)은

상습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어떻게 상습음주운전자를 관리하고 처벌을 차등화·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국회·교통 연구기관·언론·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금일 발표 내용을 포함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윤창호군 친구들도 참석을 한다. 이 자리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위 ‘윤창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한 발제자·토론회에 대한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 이춘석 의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도, 농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 나서야”

도의회 김기영 의원 5분발언

전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사진) 의원이 8일 제35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 행정으로 도울 것을 촉구했다.

김기영 의원은 “농업인들은 평소 재난재해 및 작업 중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노출돼 있어 뜻밖의 일로 인해 잠시라도 일손을 놓게 되면 한 해 농



사를 망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를 부담하고 도와 시·군 그리고 농업인이 50%를 부담하는 농작물재해보

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일정액의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농협과 함께 도내 농업인들에게 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농민의 자

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도가 우선 수범해 부담률을 높이고 시·군과도 적극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농가 부담률을 한자리 수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스스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농업인 보험료 지원액의 규모와 지원률을 아쉬운 수준이다.”며 전북도의 주요정책인 삼락농정의 핵심은 사람 즉 농업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바라전주